2026 丙午年
우리설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옥과고등학교 우암문화재단

光州日報
74 SINCE 1952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본점·여신사업부·문흥지점·양산지점·운암지점·매곡지점·첨단지점·동림지점·동광주지점·각화지점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681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12월 26일 2026년 2월 13일 금요일

‘통합 전남광주’ 미래 이끌 진짜 리더 뽑아야

전남광주특별시 원년 선거 ‘묻지마 투표’로는 미래 없어 지방선거 전국 최저 투표율 오명 경선부터 본선까지 적극 참여를

설을 맞아 고향을 찾은 가족들의 밥상머리에 오르게 될 화두는 단연 광주·전남지역에 몰아칠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다. 〈관련기사 2·3면〉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통합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전남광주특별시’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는 원년이기 때문이다. 1985년 시·도 분리 이후 30년 만에 맞게되는 전환기이기도 하다.

호남의 운명을 가를 골든타임을 맞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거대한 변화의 첫 단추를 꿰는 중차대한 분수령이다.

이번에 선출될 초대 통합시장은 단순히 행정 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자에 그치지 않는다. 통합 교육감도 매머드 조직을 이끌며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열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5대 대전환 과제로 지방 주도 성장을 첫 손 꼽고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기조에 맞춰 지방 주도 성장을 완결할 지도자가 이번에 선출하게 될 바로 통합시장임은 물론이다.

그동안 광주와 전남의 경우 유권자들의 관심은 지역발전의 염원으로 결집되지 못했다. ‘민주당의 텃밭’으로 지팡이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자조가 나올 정도로 선거에 무관심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광주시 투표율은 37.7%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압도적인 꼴찌였다.

광주·전남 지방선거는 경쟁이 약해질수록 투표 참여가 떨어지고, 낮은 투표율이 다시 ‘심판 부재’를 낳는 악순환이 되풀이 됐다.

특히 지난 선거에서 광주·전남 무투표 당선자가 속출하며 유권자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깜깜이 선거’ 부작용이 컸던 만큼, 본선거는 물론 공천권이 결정되는 경선 과정에서부터 여론조사 참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유권자의 참여만이 무투표 당선에 따른 정책 검증 부재를 막고 진정한 지역 일꾼을 뽑는 유일한 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선출할 초대 통합 시장은 인구 320만명, 경제 규모 100조원에 육박하는 초광역 메가시티의 수장이자,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 지방 분권과 국토 균형 발전을 이끌어갈 ‘호남의 대통령’과도 같은 자리이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장이나 경기도지사에 버금가는 정치적 위상을 갖게 된다.

통합교육감도 광주·전남 교원 인사권은 물론 올해 기준으로 광주시, 전남도교육청을 통틀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조8511억원을 집행하는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된다.

통합시장과 교육감은 전남광주 통합과정에서 묻어둔 수많은 난제를 해결하고 갈등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할 막중한 책무를 안게된다.

이에 따라 중앙 정부를 상대로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정치적 중량감, 인구 소멸과 경제 낙후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돌파할 경영 마인드, 그리고 광주와 전남의 해묵은 갈등을 봉합할 통합의 리더십을 두루 갖춘 인물을 뽑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광주전남은 지금 기로에 서 있다. 소멸해가는 지방 도시의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통합과 혁신을 통해 다시금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의 중심으로 우뚝 설 것인가. 그 열쇠는 오롯이 유권자의 손에 쥐어져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세뱃돈 봉투와 사탕 설 명절을 앞둔 12일 오전 광주 북구청어린이집에서 한복을 차려입은 어린이들이 전통 예절 교육을 마친 뒤 받은 세뱃돈 봉투와 사탕을 서로 비교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광주통합특별법’ 국회 첫 문턱 넘었다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에너지·AI 등 특례 19건 수용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는 12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광주전남·대전충남·대구경북 지역 통합특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1월 2일 광주시와 전남도가 국립5·18 민주묘지에서 통합을 선언한 지 42일 만의 성과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조직·행정·재정 분야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더기 삭제가 우려됐던 특례 조항 119개 가운데 별도로 추려낸 핵심 특례 조항 31건 중 19건이 수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사업자 인·허가권 확대, 재생에너지 계통망 국가지원, 인공지능(AI) 집적단지 지정 등 미래 전략 산업과 직결된 조항이다.

기초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과 의원정수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반면, 광주시가 강력히 요구했던 ‘정부 재정 지원 5조원’ 명문화는 무산됐다. 대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의무화’라는 포괄적 문구로 대체됐고, 전기료 차등요금제와 영농형 태양광 특례 등도 행안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질 예정이며,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6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신정훈(민주당·나주화순) 행안위원장은 “행정통합은 국가 생존 전략인 만큼 입법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즐거운 설 연휴 보내세요

연휴 날씨

13(금)	14(토)	15(일)
-1/13	2/16	5/13
16(월)	**17(화)**	**18(수)**
0/10	1/9	-1/9

설 특집 28면 발행합니다

광주·전남 통합 지방선거 ▶2·3면
문화 나들이, 모두의 명절 특별한 쉼표 ▶8면
설 연휴 극장에 갈까·OTT 볼까 ▶10면
2026 여수 세계섬박람회 ▶11면
광주, RE100이 미래다 ▶13면
KIA 아마미 캠프 - 나성범 “올해는 다르다” ▶22면
설 연휴 TV 가이드·운세 ▶24·25면

설 연휴 16 ~ 18일자 신문 쉽니다
광주일보 모바일은 쉬지 않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세요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광역시의회는 민간위탁 회계감사 후퇴시킨
민간위탁사무 조례를 즉각 철회하라

우리 공인회계사는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독립적·객관적 지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회계감사 전문가입니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전문적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2026년 2월 9일 광주광역시의회는 막대한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기존의 엄격한 「회계감사」를 폐지하고
이를 간이한 「결산서 검사」로 후퇴시키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이귀순 의원)」을
상임위원회 부결에도 불구하고 부의안건조차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상 회의공개원칙과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며,
공공재정 관리 수준을 스스로 후퇴시킨 결정으로서 우리 공인회계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민간위탁사업은 수행 주체가 민간이라 하더라도 그 재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 재정입니다.
이러한 사업비 집행을 전문적 회계감사가 아닌 간이한 검사로 대체하고, 지출 검증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는 세무사에게까지
검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재정 투명성과 시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공인회계사는 광주광역시의회와 광주광역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책임 있는 결단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첫째, 광주광역시장은 시민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본 조례에 대해 지방자치법이 인정한 재의요구권을 즉각 행사해야 합니다.
둘째, 광주광역시의회는 재의 절차에서 이번 결정을 다시 숙고하고, 민간위탁 회계감사 후퇴라는 잘못된 선택을 스스로 거두어들여 조례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세금을 지키고 공공재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 있는 조치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책임 있는 노력을 통해 국민과 시민의 신뢰를 지켜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2026년 2월 12일

광주·전남지방공인회계사회 · 한국공인회계사회 · 청년공인회계사회 · 여성공인회계사회